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6
----------	----

발의연월일 : 2007. 1. 22.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농수축산물(이하 “생산물”이라 한다)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유통 생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함(안 제3조).
- 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4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생산물을 유통중지 하도록 명시 함(안 제4조).
- 다. 정밀검사 결과 에 따라 "부적합"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에 관한 조치를 하고, 제4조에 의한 유통중지 후 정밀검사 결과 "적합" 으 로 판정된 생산물은 지체 없이 유통 중지를 해지 하도록 명시 함 (안 제5조).

라. 유통이 중지된 생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 함(안 제6조).

마.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안 제6조).

바. 시장은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농수축산물검사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 함(안 제7조)

사.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과다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 함(안 제8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07년 추경예산확보 예정

다. 합 의 :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음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농수축산물(이하 “생산물”이라 한다)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검사 : 농산물 중 농약에 반응하는 생물체효소 등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별하는 간이속성검사 및 수입축산물, 축산물가공품류 중 유해물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를 말한다.
2. 양성반응 : 농산물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에 의해 생물체효소 등이 50% 이상 저해 받았을 때와 수·축산물 중 잔류되어있는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에 초과하였을 때를 말한다.
3. 정밀검사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고시된 식품공전에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규정한 “잔류허용기준”의 유해물질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4. 부적합 농수축산물 : 정밀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산물을 말한다.
5. 유통중지 :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생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호에서 규정한 판매·유통·운반 등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함을 말한다.

제3조(간이검사 및 정밀검사)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시장내 유통 생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생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중지) ①시장은 도매시장내 반입된 생산물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생산물을 유통중지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중지된 생산물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밀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에 관한 조치를 하고, 제4조에 의한 유통중지 후 정밀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지체 없이 유통중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이 중지된 생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절차,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손실보상심의회)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농수축산물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손실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별도의 세부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사소의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검사소의 관계공무원 및 생산물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 등을 심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시점의 당해 생산물 가격과 유통 중지 해지 시점의 가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참석한 위원 또는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 손실보상 청구인, 이의 신청자 등 이해 당사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검사소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권한 위임) 시장은 조례에 의한 권한을 원장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17조(출입·검사·수거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응원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2005.1.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제56조 (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시료수거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산물을 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2.28, 1999.2.5, 2001.12.31, 2004.1.29>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명단

[illegible]

대전광역시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31.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1. 22 김태훈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1. 22.

다. 상 정 일 자 :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1. 31)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훈의원)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 , 17 , 56 , 「 12 , 제13조, 14 , 「 4 , 18 , 19 에 따라 농수축산물(“ ”) 이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시장 ”)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 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유통 생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3).

나. 제3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품위생법」 제4 14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생산물을 유통 중지하도록 명시함(4).

다. " "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제56 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에 관한 조치를 하고, 4조에 의한 유통중지 후 정밀검사 결과 " " 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지체 없이 유통 중지를 해지 하도록 명시함 (5).

라. " "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함(6).

마. 정밀검사 결과 " " 판정으로 폐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함(6).

바. 시장은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농수축산물검사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함(7)

사.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과다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명시함(8)

Ⅲ. 검토의견(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유통되는 농·수·축산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 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 총 10 , 1 , 2 는 용어의 정의
- 제3 는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4 5 는 정밀검사 시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생산물을 유통 중지하게 할 수 있으며, 유통 중지된 생산물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 ” 규정 생산물은 폐기조치, “ ” 규정 생산물은 유통 중지를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제6 “ ” 규정시 손실보상관련 청구절차, “ ” 규정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 는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 ” ,
- 제8 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고 있음.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물 제공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과 검사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인력의 조기 확보, ,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소 차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6
----------	----

제출연월일 : 2007. 1. 31.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제정 조례안 중 제4호, 제5호, 제6호의 별지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고,
“폐기처분”을 “폐기처분 등”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처분”을 “폐기처분 등”으로 함(안 제5조)

나. “별지 제4호”를 “규칙에 정하는”으로 함(안 제7조 제6항)

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를 “규칙에 정하는”으로 함(안 제7조 제8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폐기처분”을 “폐기처분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6항

“별지 제4호”를 “규칙에 정하는”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항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를 “규칙에 정하는”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5 ()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36 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u>폐기처분</u> 에 관 한.....	제5 ()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36 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u>폐기처분</u> 등에 관한.....
제7 () ①~⑤() ⑥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시점의 당 해 생산물 가격과 유통 중지 해지 시 점의 가격을 <u>별지 제4 조</u>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 () ①~⑤() ⑥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시점의 당 해 생산물 가격과 유통 중지 해지 시 점의 가격을 <u>규칙에 정하는</u>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 간사는 위원장이 검사소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 항 등을 <u>별지 제5 조</u> 서식 및 <u>별지 제 6 조</u> 서식에 의하여 작성·유지 및 관 리하여야 한다.	⑦ ()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 간사는 위원장이 검사소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 항 등을 <u>규칙에 정하는</u> 서식에 의하 여 작성·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